

도시공동체운동과 협동조합 지역사회 만들기

원주 협동조합운동과 네트워크의 역할

정규호

(사)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실장, 행정학 전공
ecosociety@hanmail.net

- I. 도시공동체운동에 대한 새로운 모색의 필요성
- II. 도시공동체로서 협동조합 지역사회에 대한 전망
- III. 협동조합 지역사회 모델로서 '원주'의 특성과 의미
- IV. 도시공동체를 위한 원주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의 역할
- V. 원주 모델이 우리나라 도시공동체운동에 주는 의미

I. 도시공동체운동에 대한 새로운 모색의 필요성

현대 사회의 도시화 과정이 전통 사회 공동체적 관계의 급속한 해체와 함께 진행되어왔다는 점에서 '도시공동체'라는 말 자체가 모순어법처럼 들릴 수 있다. 오랫동안 공동체적 관계의 결속보다는 개인의 익명성이 주는 자유로움과 활력을 현대 도시의 중요한 매력으로 보는 인식들이 지배적이기도 했다. 그런데 인구 1,000만의 거대 도시 서울에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 현실이다. 마을과 지역, 도시 단위에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확장해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서울 외에도 수원, 부산, 광주, 안산, 강릉 등 여러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도시민들의 자발적·자구적(自救的)인 실천 양식으로 도시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있어왔지만, 지금처럼 도시계획과 정책, 관리 영역을 포괄해서 여러 곳에서 공동체가 주요 과제로 등장한 것은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다.

이처럼 근래에 도시공동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은 도시적 삶이 주는 소외감과 불안감, 피로감들 속에서 공동체적 관계의 복원과 확장을 통해 삶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도시를 둘러싼 안팎의 급격한 변화로 도시민들이 겪는 충격과 부담들이 개개인들이 감당하기에 어려울 만큼 커져 홀로 살아가기에 벅찬 현실을 자각한 사람들이 '협동'과 '공동체'를 생존의 원리이자 삶의 가치로 적극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정규호, 2012a: 64).

이제 도시공동체는 지나간 추억이나 막연한 가능성의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삶의 희망이자 대안의 영역이 되고 있다. 도시민들이 당면한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고 생활에 필요한 공공재를 공동생산하며 상호 의존적인 관계망을 만들어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높이는 데 도시공동체가 가진 역할과 가능성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도시공동체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노력, 즉 도시공동체 '운동'이 필요하다. 즉, 도시 자체가 다양성과 역동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듯이 도시 구성원들 또한 서로 다른, 심지어는 상호 대립적인 관심과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성원들로부터 공감과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ooij, 2010: 9).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도시공동체 운동은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경험과 역량을 축적해오기보다는 사회구조 및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단절과 불연속의 과정을 반복해 왔다(정규호, 2012b). 따라서 민간 자율적인 노력에 의한 자생적 도시공동체운동의 경험은 매우 일천하다. 이런 가운데 오늘날 도시들은 경제와 사회, 공간 영역을 아울러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지역자립 기반 붕괴와 공동체적 관계 해체, 불균형과 양극화의 심화가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 지역의 정착성과 자족성, 상호 신뢰와 연대를 높일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새로운 도시공동체운동에 대한 전망과 전략 모색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마침 최근 들어서 경제와 사회, 공간 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차원의 주체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연결시켜서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높이고자 하는 복합형 도시공동체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마을공동체 사업과 사회적 경제운동을 결합해 새로운 도시공동체 모형을 실험하고 있는 것도 그 예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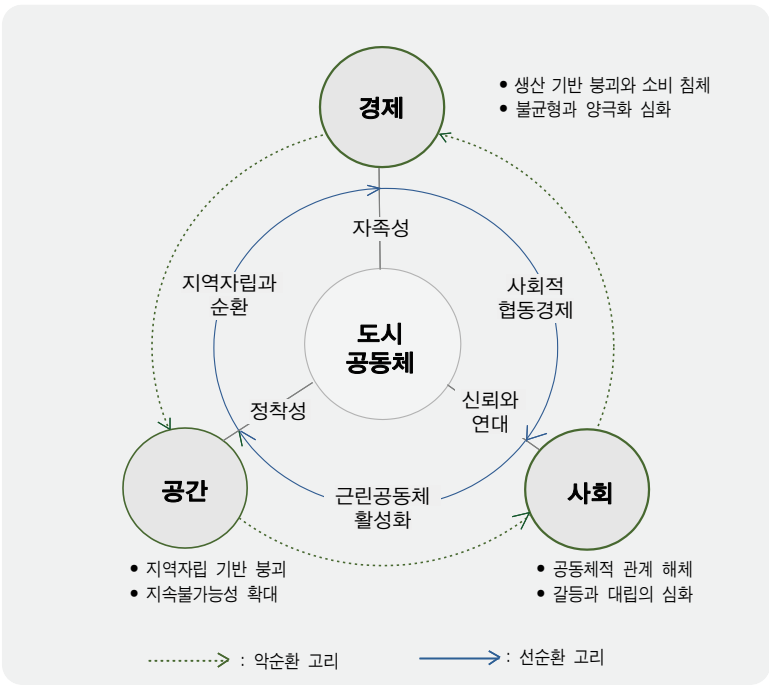


그림1-경제-사회-공간의 복합위기와 도시공동체운동의 방향

하지만 국가 주도형, 대외 의존형 성장 중심 경제체제의 관성이 여전히 뿌리 깊은 우리 현실에서 경계를 넘어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삶의 필요들을 아래로부터 재조직하는 도시공동체운동의 경험과 실천 모델은 매우 부족하다. 이것은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주도과 지원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최근의 공동체 관련한 사업들이 ‘칸막이 행정’, ‘형식적 거버넌스’, ‘조급한 성과주의’에 막혀 민간 주체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지 못하며 지역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¹⁾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제 도시공동체운동에 대한 이론과 실천방식은 행정을 비롯한 외부로부터 지원되는 자원에 의존해서 ‘만들기’ 하는 단계를 넘어서,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키워내고’ ‘깨어내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민간 영역의 자율적 힘으로 지역사회 자원들을 조직해서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내는 노력은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를 위해 핵심적인 과제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존재해오던 기존의 풀뿌리운동, 마을만들기운동, 자활 및 사회복지운동,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운동, 학습 및 문화 공동체운동 등의 다양한 실천 주체와 영역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공동체적 그물망으로 짜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전망과 실천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공동체운동의 새로운 실천 모델의 필요성과 가능성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론적 검토를 통해 도시공동체에서 자립이 가지는 의미와 실천 방식으로서 협동조합 원리를 살펴본 후, 협동조합 지역사회가 가지는 도시공동체로서의 의미와 역할들을 다룰 것이다. 이어서 협동조합 지역사회로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서 원주 지역 협동조합운동의 현황과 특성, 그리고 그 배경적 요인들을 다루고자 한다. 나아가 원주에서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데 협동조합 네트워크 조직이 가진 기능과 역할들을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밝혀낸 다음, 이러한 원주 모델의 경험이 우리의 도시공동체운동에 주는 시사점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양세훈, 「마을공동체 활성화 핵심수단, 사회적 경제 프로그램과의 연계방안」,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자료(2013), 2-3쪽.

II. 도시공동체로서 협동조합 지역사회에 대한 전망

1. 도시공동체에서 자립의 의미와 협동조합에 대한 새로운 기대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도시정책과 도시사회운동 영역에서 공동체가 의미 있는 과제로 등장하고 있지만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여전히 크며, 특히 지역의 취약한 자립 기반은 도시공동체에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51.9%에 불과하며, 전체 자치단체 중 재정수지가 흑자인 곳이 92개(37.7%)인 반면 적자인 곳은 152개(62.3%)로 훨씬 더 많다. 자치단체의 재정 지출과 수입의 불균형이 점점 확대되어온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총 부채가 126조에 달해 이후 상황에 따라 많은 지자체가 재정파산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경제의 장기침체와 국가의 재정위기로 인해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이나 보조금도 점점 줄어들 전망이어서 지역들은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여 외부로부터 투자 유치를 적극 이끌어내거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한 지역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거나, 국가와 시장에 의존하지 않는 대안적 자립경제 영역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여기서 도시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에 자립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자립 기반이 취약할 경우 도시 스스로의 정체성과 정착성을 가지기 힘들며, 삶의 공간이 안정되지 못하고 이동성이 높을 경우 상호 유대감과 관계의 긴밀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그동안 도시지역에서 시도되었던 많은 공동체 실험이 구성원들의 주거 이동으로 인해 약화되거나 해체되었던 경험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금처럼 세계경제 전체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관련하여 단순히 변화에 순응(adapt)하기보다 스스로의 자립 전망을 갖고 포괄적 전략을 채택(adopt)하고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Cabaj, 2004: 16).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전개되어온 기존의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자활, 사회적기업 같은 사업들 가운데 자립의 전망을 분명히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지자체별로 협동과 공동체를 내세운 다양한 사업과

활동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지만 아래로부터 주민 자립의 기반을 만들고 확장시키고자 하는 인식과 전략은 부족했다. 오히려 비자립적 태도들이 공동체 관련 사업에 결합되는 경우도 많은데, 예를 들어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동체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배경에는, 직접 다루기에는 부담스러운 중요 사회 현안들을 시민사회 민간 영역의 힘을 빌려 해결하고자 하는 행정의 욕구와,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하기 어려웠던 운동적 과제를 외부의 자원을 활용해서 해결하려는 사회운동 주체들의 필요성이 서로 결합되어 만들어낸 영향들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정규호, 2012a: 77).

결국 도시공동체에서 자립은 중요하며, 자립의 내용에는 재정적인 측면은 물론 식량, 에너지, 물 등 도시의 형성과 운영에 필수적인 핵심 자원, 나아가 시민들의 자립 의식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튼튼한 자립기반을 가진 도시공동체의 가능성으로서 ‘협동조합 지역사회(cooperative community)’에 대한 전망을 적극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 지역사회는 지역에 튼튼히 뿌리내린 협동조합들이 유무형의 자립 기반을 확장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체성과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데 의미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협동조합 지역사회는 경제적 약자의 권리증진에 초점을 맞추었던 협동조합의 전통적인 역할 모델을 넘어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 구성원들의 필요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목표를 포괄적으로 실현해나가는 보다 확장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다(Nadeau and Wilson, 2001: 65). 초기 협동조합이 산업자본주의의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극복하고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면, 지금은 세계를 무대로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아다니는 금융자본주의의 파괴적인 위력으로 지역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총체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구성원들 상호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사회경제적 환경을 새롭게 개선해나가는 협동조합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Majee and Hoyt, 2011: 49). 상호 신뢰와 조직화된 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역할자로서 협동조합에 대한 기대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7원칙에 포함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²⁾

2. 도시공동체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과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의미

지역에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힘은 지역의 생활주체들이 돌봄 노동, 보건 및 의료, 교육 및 문화, 주택, 환경 등 지속가능한 생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민주적이고 협동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협동조합은 다양한 가치와 삶의 동기를 가진 자유로운 개인들이 모여 서로 경쟁적으로 살아가는 현대 도시에서 공동체성을 확장시키는 데 유의미한 방식이다. 사람들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향상시켜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 협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자라는 것이다(Majee and Hoyt, 2011: 52).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은 지역에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인적·물적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결집시켜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발전에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준다(Zeuli and Radel, 2005: 43).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 자원의 조직화는 정부나 민간단체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지속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해 지역주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성을 높이는 역할도 한다. 실제로 협동조합이 발달한 지역에서 주민들의 출자로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 수익을 지역에 다시 순환시켜 지역 자립 기반을 높임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높인 사례가 많다.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협동조합은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공동의 목표를 위해 뜻과 힘을 모으고, 상호 신뢰와 상부상조를 바탕으로 필요 자원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며, 생활과 밀접한 재화와 서비스를 지속 가능하게 생산해냄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협동조합은 '지역 자원의 효과적인 결집과 연결', '지역의 자립과 주체성 확립', '지역적 통합과 공동체성 강화', '지역 정체성과 정착성 강화',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과 문제해결 역량

2) 협동조합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1995년 ICA 창립 100주년 기념 대회를 맞아 개정된 협동조합 원칙에 새롭게 포함된 것으로, 2010년에 개정된 우리나라의 생협법에도 이 내용을 생협의 주요 역할로 담고 있다.

강화' 등 지역사회 의 공동체적 발전에 매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정규호, 2012a: 68-69).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소유하고 이용하고 통제하는 협동조합이라는 경제활동 조직체를 통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 즉 물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생태적 자원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그 결과를 함께 나눔으로써 협동조합 지역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은 도시공동체 운동의 새로운 전망으로서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협동조합의 결사체가 가진 가치와 특성을 사업체의 경제활동으로 풀어내서 지역사회의 자립성과 관계성, 나아가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로 협동조합 지역사회이기 때문이다.³⁾

바로 이런 관점에서 원주 지역의 협동조합운동을 사례로 하여 도시공동체의 새로운 모델로서 협동조합 지역사회가 가진 특성과 가능성, 그 내용과 원리들을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III. 협동조합 지역사회 모델로서 '원주'의 특성과 의미

1. 협동조합 지역사회 모델 사례로서 '원주'의 특성

인구 32만의 강원도 중소도시 원주는 1960년대 중반부터 신흥운동, 소협운동, 협동적 부락개발사업 등을 활발히 전개해온 협동조합운동의 뿌리가 깊은 곳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협동조합운동의 경험이 지나간 역사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까지도 이어져 지금은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만들기의 대표적인 모델 도시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협동조합 지역의 모델 사례로서 원주 지역이 가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주는 협동조합과 도시공동체에 대한 모범적 사례 지역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다. 작년 2012년이 유엔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이고 연말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서 협동

3) 협동조합은 퇴니스의 구분에 따른 사회조직으로서 '결사체(게마인샤프트)'와 경제조직으로서 '사업체(게젤샤프트)'가 결합된 '게노센샤프트(genossenschaft)'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김형미, 2013: 18).

조합이 커다란 관심사로 등장했는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원주에서 펼쳐온 협동조합운동의 경험과 성과들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것은 2012년 한 해 동안 원주의 협동조합운동 내용과 방식을 배우기 위해 원주를 방문한 사람들이 92개 단체 2,760명으로, 개별 방문까지 포함하면 198개 단체 약 5,000여 명에 이른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둘째, 원주의 협동조합 사례가 수도권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지방 중소도시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서 서울과 수원 등 도시공동체를 적극적인 실천 과제로 삼는 지자체들이 나오고 있으나, 재정적·인적 기반이 열악하고 단체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지자체들에게는 이것 또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원주는 수도권 대도시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에서 만들어진 사례로서,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 틀에 의존하지 않고, 단체장의 적극적인 도움도 받지 않은 채, 시민사회 민간 영역의 자율적 노력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것은 원주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의 이야기에서도 확인되는데, “원주와 같은 평범한 지방 소도시의 성공은 국내 다른 지방 도시들에게까지 협동조합의 모델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서울과 같은 큰 도시에서 만들어진 대안을 보면서 자극받고 도전할 수 있는 소도시는 많지 않지만, 원주의 실험은 그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는 최혁진(2011)의 이야기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원주의 협동조합 사례는 민간 자율적인 힘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상향식으로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원주 지역은 지역사회와 민간 협동조합 조직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네트워크를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풍부하게 갖고 있다. 즉, 개별 민간 주체들이 가지는 역량의 한계를 네트워크를 통한 협동으로 극복하면서 지역사회 전체를 협동조합 생태계로 만들어오고 있는 것이 원주가 가진 중요한 특징이자 장점이다. 원주는 전체 인구의 약 1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금융·소비·생산·교육·의료·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곳으로, 그만큼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협동조합 간 협동’의 사례가 다양한 곳이다. 이처럼 원주는 민간

차원에서 형성된 탄탄한 구심력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자원들을 중심을 잃지 않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원주의 협동조합 경험을 배우기 위해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올해부터 원주시가 협동조합을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연계하는 계획을 세우고 지역의 협동조합 주체들에게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제안하는 과정도 바로 그러하다.⁴⁾

현실에서 활동 공간과 영역을 달리하는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협력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개별 조직들의 등장 배경과 목적, 조직구조 및 운영방식 등이 서로 다르고, 특히 경제활동 조직으로서 수익구조와 배분방식은 민감한 문제여서, 이런 차이들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협력활동을 하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원주 지역의 협동조합들이 네트워크 체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결을 찾아내는 것은 도시공동체운동에서도 중요한 과제다. 이 점에서 원주 지역에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축적된 협력의 자산들이 성찰과 전환의 과정을 통해 현재의 활동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원주 지역 협동조합운동의 승계와 전환의 과정들

원주 지역의 협동조합운동들은 시대별로 구분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⁵⁾ 여기서는 위기와 도전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약 반세기 동안 이어져온 원주 협동조합운동의 흐름을 ‘승계’와 ‘전환’의 관점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4) 올해부터 원주시와 시의회는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협동조합지원센터 설치, 협동조합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 지방세 감면과 각종 예산지원 등 민간 차원의 협동조합운동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워 추진하기 시작했다.

5) 원주 협동운동의 흐름과 변화를 농촌 농민문제 해결을 위해 신흥과 소협운동을 펼쳤던 ‘발흥기(1970년대 초-1980년대 초)’,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에 기반한 생협운동을 펼친 ‘정착기(1980년대 중-1990년대 후)’, 협동조합 간 협동과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하는 ‘확장기(1990년대 초-현재)’의 3단계로 구분하기도 한다. 서성진, 「원주지역 생협운동의 프레임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0).

1) 재해대책사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협동적 지역개발 사업의 전개 (1960-1970년대)

원주에서의 협동조합운동은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1966년에 원주 최초로 원동성당에서 자주적 협동조합인 원주신협이 설립된 이래⁶⁾, 문막신협에 이어 단구신협(1968), 진광 협동교육연구소(1969), 진광, 새교신협(1970) 등이 연이어 만들어져 운영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원주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협동조합 지역개발 사업들이 전개, 확산되기 시작했다. 1972년은 원주 협동조합운동사에서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신협법이 제정(1972. 8. 17)되어 신협운동이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고, 원주 지역 협동조직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온 밝음신협(1972. 10)도 그때 만들어졌다. 특히 중요한 것은 1972년 8월 19일에 발생한 남한강유역 대홍수⁷⁾로 인해 원주는 물론 강원, 충청 지역 협동조합운동의 중요한 기반이 된 '재해대책사업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⁸⁾ 재해대책사업위원회는 농촌, 광산 지역의 신협운동을 통해 고리채 문제를 해결하고, 소협운동을 통해 생활용품과 농자재 등 공산품 공동구매로 경제적 부담을 협동적으로 해소하였으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생산협동체, 이용협동체 등을 만들어 협동적 부락개발사업들을 펼쳤다. 김용우는 "이 사업에는 협동조합연구소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협동조합운동가들이 결합하였고 단순한 구휼사업이 아니라 마을 단위의 공동체운동과 자립, 협동조합운동을 병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2002: 20).

이처럼 1970년대에 원주 지역에서 협동조합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었던 데는, 지학순 주교를 중심으로 한 가톨릭 원주교구의 보호막 아래 소위 '원주 캠프'로 불릴 정도로 1970년대의 민주화운동의 거점 역할을 하면서 전국의 인재들이 원주 지역으로 모여든 영향도 컸다.

-
- 6) 원주신협의 설립 정신은 "고리채로부터 농민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자본주의 모순 속에서 사람답게 사는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당시 구호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 7) 남한강유역 집중호우로 강원, 경기, 충북 3도 13시군 87읍면에 걸쳐 수재민 14만 5,000명, 주택 피해 2만 2,967동, 농경지 피해 1만 9,645정보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 8) 지학순 주교의 노력으로 국제 카리타스와 서독주교단으로부터 총 291만 마르크(당시 약 3억 6,000만 원)의 막대한 재원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1973년 재해대책사업위원회가 만들어져 협동적 지역개발사업들을 펼쳐나갔다. 재해대책사업위원회는 이후 사회개발위원회(1979), 원주교구 사회사업국 사회개발부(1983), 사회선교국(1990)을 거쳐 1993년 해산에 이르기까지 20여 년간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협동운동이 뿌리를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 1차 전환기: 기존 운동방식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모색(1980년대 초)

원주가 구심점이 되어 전개된 협동조합운동은 1970년대 말에 이르러 커다란 도전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은 이촌향도(離村向都)로 표현되듯 농촌에서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 이동과 함께 농촌지역의 과소화(過疎化), 공동화(空洞化)를 가져왔는데, 이것은 재해대책사업위원회가 농촌 지역사회에 만들어놓았던 수많은 협동조직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1980년대 소값 파동 또한 한우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에 만들었던 협동적 생산공동체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었으며, 오일쇼크 이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로 광산지역에 만들었던 신흥과 소협 등 협동조직들도 비슷한 운명을 맞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경제적 요인과 함께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 또한 원주 지역에서 펼쳐왔던 운동의 노선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무엇보다 1970년대 말 박정희의 갑작스런 사망과 함께 신군부가 정권을 잡은 뒤 발생한 1980년 광주사태는 원주캠프를 중심으로 민주화운동을 펼쳐온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 일을 계기로 원주 지역에서는 정치적 민주화에서 자립과 자치, 협동에 기반한 경제민주화로, 권력 구조의 변화에서 생명사상에 기반한 삶의 방식의 전환으로 운동 노선을 바꾸게 된다(김기봉, 1998: 82; 신병식, 2000: 29). 특히 1984년 일본 카리타스의 지원을 받아 당시 협동운동, 농민운동가들이 일본의 제휴운동, 생활협동조합운동, 공동체운동 사례들을 견학한 것은 새로운 운동 방식을 모색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3) 생명운동 노선의 협동조합운동 등장과 도시 속으로의 확장(1980년대 중반)

1980년대 들어 원주 지역에서 생명사상을 바탕으로 한 운동으로 새롭게 선택한 것이 바로 생활협동조합이다. 이것은 경제적 약자로서 소비자의 권익을 실현하고자 등장했던 유럽형 소비자협동조합보다는 생활인들이 협동의 힘으로 생활재를 만들어 이용하고 삶의 자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일본의 생활협동조합 유형에 가깝다. 하지만 원주에서 시작된 생명운동 노선의 협동조합운동은 친환경 농업을 통해 땅을 살리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촌의 생산자들과 이들의 가치와 수고로움을 올바르게 인정해주는 도시의 소비자들이 손을 맞잡고 직거래

방식을 통해 도농상생의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한 점에서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김용우, 2002). 원주에서 시작된 한살림운동은 그 대표적인 예로서, 운동 목표는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구호에 잘 담겨 있다.

농촌과 도시 지역이 연계된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한 협동조합운동 노선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1960-1970년대에 원주 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던 신탁, 소협, 협동적 부락개발사업 등 기존의 협동조합들이 사회 전체적인 환경과 구조의 변화과정에서 무너지는 경험을 통해 지역을 연결한 협동적 네트워크로 자립 공동체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생산력 증대주의로 인한 화학농법의 폐해가 농촌 생산 현장에서 빈발하고 급속한 산업화·공업화로 인해 자연생태계가 급속히 파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생태적 자각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후 원주에서 시작된 한국형 생활협동조합운동은 도시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1990년의 대중소비 사회 등장과 2000년대의 웰빙 바람에 힘입어 우리 사회의 협동조합과 공동체운동에 의미 있는 기반을 만들어냈다.⁹⁾

4) 2차 전환기: IMF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에 대한 모색 (1990년대 말)

1997년 우리나라 전체를 커다란 혼란과 혼동 속으로 몰아넣은 IMF 경제위기는 협동조합운동 영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IMF 사태는 한국사회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와 소득양극화, 사회계층 양극화를 심화시켰으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기존의 평생직장 개념을 불식시키고 대량 실업과 고용불안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협동과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를 복지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원주에서도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다양한 자각과 성찰이

9) 물론 생활협동조합운동의 빠른 성장에는 친환경농업육성법(1997)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1998) 등 제도적 환경 변화도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일어났다. 개별 협동조합이 나름대로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왔지만, IMF 경제위기와 같은 커다란 외부 충격 앞에서는 풍전등화와 같은 신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김선기, 2011: 34), 지역을 기반으로 한 보다 단단한 협동운동의 토대 형성과 상호 간 협력의 필요성을 자각하기 시작했다.¹⁰⁾

원주 지역의 젊은 협동조합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런 문제의식은 2003년 네트워크 조직인 '원주 협동조합운동협의회'의 창립으로 이어졌다. 위기 상황에서 개별 협동조합과 조직들의 분리된 활동으로는 지역이 당면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네트워크 조직을 만든 것이다. 여기에는 2002년에 밝음신탁, 원주한살림, 원주생협 등 원주 지역의 3개 협동조합 조직이 공동출자를 통해 원주 의료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낸 경험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협동조합운동협의회는 참여 단체들 간의 회의체 구조를 가져오다가 2007년부터 협의회에 사무국을 만들고 실무인력 배치를 통해 활동의 구심력을 만들어 왔다.

5) 네트워크 연결망의 확장과 심화를 통한 협동조합 지역사회 만들기 (2000년대 후반-현재)

원주의 협동조합 네트워크 조직은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 또 한 차례의 질적 전환을 모색하게 된다. 여기에는 기회와 위기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는데, 우선 2007년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정으로 원주 지역에도 사회적 기업을 포함해 다양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원주 지역의 의료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해온 의료생활협동조합도 2007년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에 이른다.

한편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경제의 침체와 장기저성장 상태에서 양극화의 확대와 복지 및 일자리 문제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원주 협동조합 조직들은 기존의 느슨한 네트워크 방식으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그 결과 2009년에 기존의 '원주 협동조합운동협의회'를 협동조합과

10) 원주 지역 협동조합운동이 새로운 전망 모색을 하게 된 데는 신자유주의 폐해와 정부개입 증가 외에 원주의 초기 운동가들의 연료와 후진 양성 미흡과 조합원 활동의 위축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작용하였다. 최혁진, 「시장경제를 넘어 지역과 미래를 살린다」, 『환경과 생명』 제50호(2006).

사회적기업 등 19개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원주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로 확대 전환하기에 이른다.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는 참여 주체들의 확대는 물론 내용 면에서도 금융, 의료, 보육, 복지, 문화, 소비자, 생산자 협동조직 등을 아우르는 형태를 갖추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의 공동체 형성에 대한 전망을 구체화하기에 이른다. 원주에서 협동조합 복합체를 통한 지역공동체 건설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것도 이때부터다.

한편 2012년 말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서 생협과 사회적기업 외에 다양한 유형의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원주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는 올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에 이른다. 이는 전국 최초로 협동조합을 위한 협동조합을 설립한 사례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맞춰 법인격 취득을 통해 당사자 조직으로서 협업(協業)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과 공동체 실현을 위한 전망을 현실화하고 있다(김선기, 2012a).

종합해보면, 원주 지역은 약 반 세기의 역사를 통해 내외부적 환경 변화와 도전 속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운동의 경험을 축적해 오면서 협동조합 지역사회에 대한 전망을 단계별로 구체화시켜왔음을 알 수 있다. 즉, 원주 지역에서는 1960년대 중반부터 협동조합운동을 다양하게 펼쳐왔는데,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속에서 협동조합의 지역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운동 노선의 전환을 통해 도시와 농촌지역을 아우르는 지역 간 연계를 통한 협동조합 운동을 1980년대 중반부터 펼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97년 IMF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원주 협동조합운동 진영에서는 지역 자립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전략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게 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한 새로운 협동조직을 만든 경험을 토대로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출범하게 된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과 새로운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등장으로 보다 강한 결속력을 가진 네트워크 체계를 만들게 되었으며, 이런 경험을 토대로 최근 들어서는 네트워크의 연결망을 확장, 심화시켜 협동조합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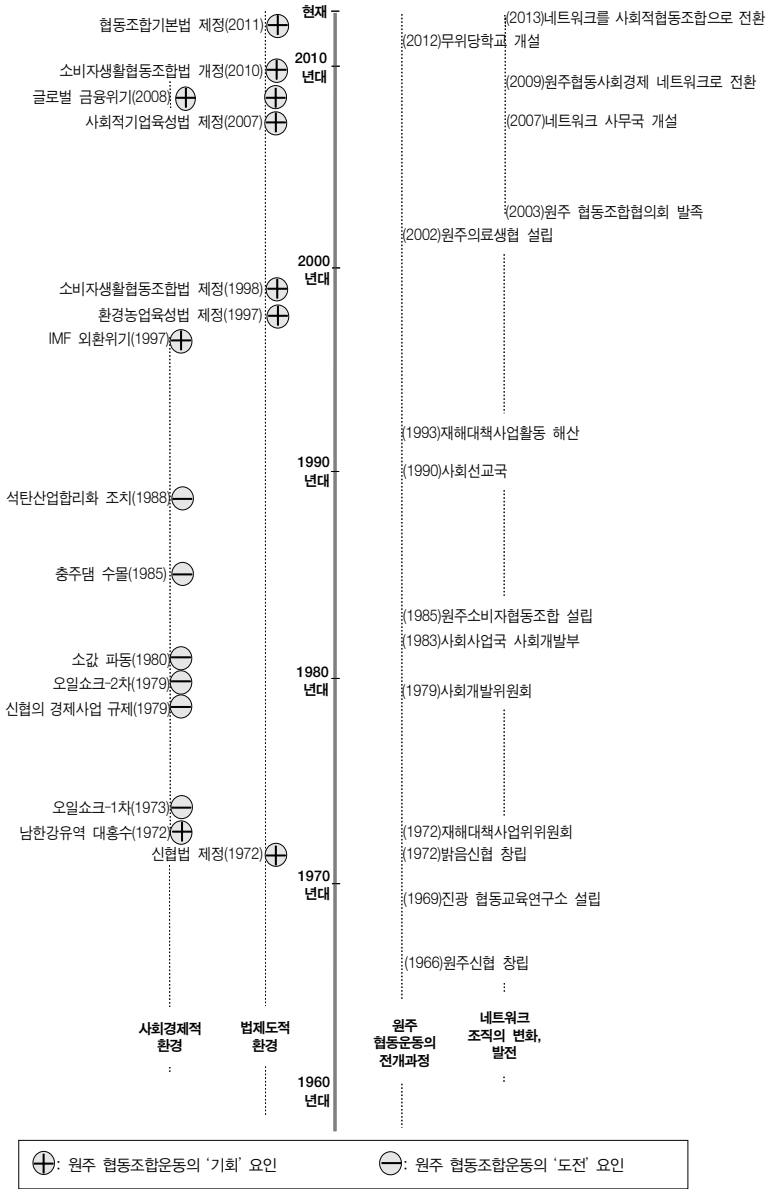


그림2- 원주 협동운동의 전개과정과 기회와 도전 요인

IV. 도시공동체를 위한 원주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의 역할

1. 원주 지역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현황

현재 원주 지역에는 전체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약 3만 5,000여 명의 조합원(중복 조합원 포함)이 네트워크를 통한 협동사회경제 영역에 참여하고 있으며, 네트워크의 연간 매출액은 약 300억 원으로 460여 명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다.

2013년 10월 현재 원주 지역에서 협동사회경제 영역을 이끌어가는 네트워크 조직에는 신협(1), 생협(4), 사회서비스 기관(3), 교육기관(2), 농민생산자 단체(2), 사회적기업(3), 주식회사(3), 사단법인(3), 협동조합(2개) 등 총 23개의 조직이 ‘회원단체’로 참여하여, 생산-유통-소비, 금융-교육-복지 등을 서로 연계하여 지역사회를 공동체적 그물망으로 만들어가고 있다.¹¹⁾ 이 외에도 원주 지역에는 다양한 유형의 활동 조직이

표1-원주 지역 협동사회경제 단체 현황

구분	단체
네트워크 '회원'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협동조합 1개: 원주밝음신협 • 생활협동조합 4개: 원주한살림, 원주생협, 원주의료생협(사회적기업), 원주노인생협 • 사회서비스기관 3개: 원주지역자활센터, 성공회원주나눔의집, 갈거리사랑촌 • 교육기관 2개: 공동육아협동조합 소꿉마당, 참꽃어린이교육협동조합 • 농민 생산자단체 2개: 남한강영농조합법인, 토요영농조합법인 • 사회적기업 3개: (유)다자원, (합)햇살나눔, (주)노나메기 • 주식회사 3개: (주)살림농산, (주)원주생명농업, (주)행복한 시루봉, • 사단법인 3개: (사)서곡생태마을, (사)음악만들기양상블, (사)한국전통예술타일 아을 • 협동조합 2개 : 원주푸드협동조합, 원주로컬푸드카페협동조합
네트워크 '관련'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사회경제연구원, 삼지대산학협력단(사회적기업 창업팀 육성), 강원도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황성친환경가공생산자연합회, 태장동LH마을형 사회적기업, 위스타트태장마을센터(원주의료생협), 주거복지센터, 밝음지역아동센터(원주의료생협) • 청년창업팀 10여 개 • 관련 사회적기업 2개: 신화마을영농조합법인, 원주YMCA 아가아

11) 원주 지역은 협동사회경제 활동 주체가 다양하고 사업과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곳이어서 네트워크 참여 단체 현황은 해마다 바뀌고 있다.

네트워크 '관련 단체'로 참여해 원주 지역의 협동사회경제 영역을 활성화 하는 데 함께하고 있다.

현재 네트워크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차장, 협동조합 해설자 2명, 협동조합설립지원업무 1명 등 총 5명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원주시가 3억 8,000여만 원을 들여 원주시 일산동 지하상가에 사무실과 회의실 등을 갖춘 921.38m² 규모의 협동조합 광장(협동조합 존)을 조성하였는데, 원주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가 민간 위탁자로 선정되어 해당 시설을 활용해 10월 중순부터 협동조합 교육 및 견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지역사회 공동체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의 역할 분석

1)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네트워크의 역할과 배경적 요인

원주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는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공동체의 형성 및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서성진, 2010).

특히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과 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협동 조직을 네트워크의 힘으로 만들어 운영해오고 있는 점은 지역의 공동체성 증진과 깊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원주의료생협'의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일반 민간 의료기관들이 외면하고 있는 재가 서비스나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아동센터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인들로 구성된 '원주노인생협'의 경우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 형태로 지역 초등학교에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식당 운영을 통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갈거리 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의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실시하여 자활의 기반을 협동의 힘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처럼 원주의 다양한 협동조합운동

표2-원주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의 지역공동체에 대한 기여

구분	내용
경제적 측면	• 협동조합의 수익을 조합원 및 지역공동체 사업에 투자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사회적 측면	• 의료생협, 노인생협, 노숙자생협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정치적 측면	• 친환경 급식 조례 발의와 같은 제도 개선과 지역 현안의 의제화
문화적 측면	• 베품시장, 문화행사 주체, 환경축제 진행 등

조직의 이러한 활동들은 네트워크의 설립 목적 자체에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대한 지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원주 지역의 협동조합운동 조직들이 서로 각자가 가진 다양성과 차이들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는 것은 오랜 시간을 통해 지역사회에 축적해온 협동의 문화와 경험이 세대를 이어 현재의 활동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박준영, 2010). 관련해서 서성진은 “장일순의 생명, 공생, 협동이 하나의 고리를 형성하는 사상적 기반과 협동조합운동 1세대들의 경험이 후세대 활동가들의 학습과 기억을 통해 재생산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2010: 128). 실제로 원주 지역의 협동조합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들은 원주의 협동문화를 ‘협연(協緣)’으로 부르면서 이것이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 연대의 ‘협업(協業)’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조세훈과 우영균(2008)은 “원주에서는 협동조합을 통해 생활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40여 년간 계속되어왔고, 이는 분명 타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박준영(2011: 69)은 “일반적으로 혈연과 학연과 지연을 따지는 이 풍토 속에서 원주에는 협동하는 인연이 하나 더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2)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협동사회경제 영역의 재구성

2000년대 말부터 원주의 협동운동가들은 기존의 느슨한 네트워크 체계로는 세계경제 위기와 양극화의 심화 같은 급속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고민과정을 통해 네트워크의 관계망을 보다 긴밀하게 하면서 협동사회경제 영역의 재구성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공동체적 전망을

표3-네트워크 설립 목적에 나타난 공동체 지향

구분	내용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2003)	대안 사회를 위한 새로운 기획을 주제로 지역주민 참여의 지역경제 활성화, 생명의 도시에 걸맞은 산업 시스템 구축, 협동경제 이윤의 지역 사회복지 재투자를 통한 지역공동체 건설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2009)	협동정신과 생명존중 사상을 기반으로 한 협동사회경제운동 활성화와 협동과 자치의 지역사회 건설,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생명공동체 건설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2013)	상부상조의 협동정신과 생명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운동 등 협동사회경제운동을 활성화하며, 상호 긴밀한 연대를 통해 협동과 자치·지립의 지역사회 건설,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생명공동체 건설

모색하게 된다.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의 네트워크와 상호 부조 시스템의 확립으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적극 활용해서 ‘보호된 시장’, ‘연대의 시장’을 만들어 자립 기반을 확대하여 지역공동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원주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2011).

이때부터 원주 협동조합운동 진영에서는 ‘사회적경제 블록화’, ‘협동사회경제 생태계 조성’과 같은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원주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에서는 2011년 3월 19일 ‘원주에 사는 즐거움’ 첫 번째 잔치의 심포지엄을 통해 당시 네트워크 19개 회원단체와 관련 사회적기업 3곳 등 22개 조직이 ‘생명공동체를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협약’을 맺고, 상호 발전을 위한 협업 시스템의 안착과 잉여의 사회적 재투자에 합의 하였다(김선기, 2012b: 130). 2012년 5월 12일에 열린 ‘원주에 사는 즐거움’ 두 번째 잔치에서는 ‘협동조합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협동기금 추진 전략’과 ‘협동 교육 체계 확립 및 운영 계획’, 그리고 생산-유통-소비 단체 간 협력을 통한 ‘원주푸드 물류협동조합’ 설립 등을 제안하게 된다.

한편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고민도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그 결과로 2013년에 전국 최초로 네트워크를 ‘2차 협동조합’ 성격을 가진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었다. 여기에는 원주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성격의 네트워크 회원 단체와 관련 단체들이 가진 기능과 역할, 자원, 역량, 경험들을 서로의 필요에 맞게 연결시켜 지역사회 전체의 공동체적 활력을 높이고자 하는 고민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원주가 만들어낸 2차 협동조합은 법인격을 획득해 공동의 필요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기본법상 협의회와 다르고, 동종(同種)만이 아닌 이종(異種) 협동조합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법상 연합회와도 다르다. 또한 내용 면에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 비슷하나 ‘당사자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이들과도 다른 특성이 있다(김선기·김달현, 2012).

이처럼 원주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구성과 내용, 체계의 변화를 만들어온 것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조직을 사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사회적경제의 협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자립과 순환의 ‘협동조합 복합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뚜렷한 목표의식이 지역사회 활동가들 사이에 공유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3) 상호 부조와 협업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지역공동체 실현

원주는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협동사회경제 주체를 ‘그물망’처럼 엮어 상호 부조와 협업 시스템을 만듦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전망을 실현해가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들은 네트워크를 비롯한 지역 단체들의 사업과 활동 속에 드러나고 있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사업은 협동사회경제 영역에 속한 지역 단체와 개인들의 급여 통장을 신협으로 통일해 협동적 금융 기반을 다지는 일부터 각 단체의 회원들을 다른 단체 회원으로 중복 가입하도록 안내하는 일, 지역 내 다른 단체들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조직별로 책임 구매함으로써 사업적 안정성을 높이는 일, 나아가 공동의 자본 조성과 상호 출자 등을 통해 경영적 어려움을 공동으로 해결해나가는 일 등 다양하다.

이런 네트워크의 힘을 통해 만들어낸 사업체들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행복한달팽이 식당사업, 원주한살림의 살림농산 참기름 가공공장 분화, 나눔의집 햇살나눔 친환경과자 생산사업 분화, 원주생협이 도정공장 및 지역유기축산사업, 가톨릭농민회의 우리농매장사업, 의료생협의 아동복지 및 교육과 장기요양서비스사업 등이 있다.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체계는 활동 영역에서도 나타나는데, 학교급식 조례제정과 로컬푸드운동 전개, 화상경마장과 골프장 건설에 대한 반대 운동 등 주요 지역 현안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해왔으며, 참여 주체들 간의 소통과 역량강화를 위한 홍보와 교류, 교육, 연수 등의 활동도 상호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해결해왔다(정규호, 2008). 네트워크 차원의 선진지 견학과 공동 토론회 및 학습모임 운영, 관련 단체들이 몇 년째 지속해오고 있는 송년의 밤 행사와 2011년부터 함께 기획해 진행해오고 있는 ‘원주에 사는 즐거움 잔치’ 행사, 협동조합 공동소식지 ‘원주에 사는 즐거움’ 매월 발간과 회원단체들의 공동계시판 운영 등을 통해 상호 교류와 이해를 증진시켜오고 있다.

이처럼 원주 지역에서 사업과 활동을 아울러 교류 및 협력이 활발하게 된 데는 오랜 기간 지역에 축적된 협동의 경험들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원주밝음신협의 경우 오랜 기간 지역사회 협동조직들의 인큐베이터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이것은 현재에도 밝음신협이 소유한 빌딩 내 여러 공간을 여러 지역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데서도

표4-협동기금 조성 및 활용 방안

협동기금 조성 방안	협동기금 활용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단체 초기 출자금 및 분담금 · 협동사업체 운영에 따른 잉여금 · 지역거래 활성화를 통한 기금조성 · 조합원 상호 이용거래를 통한 기금 조성 · 협동조합 내부 금융을 통한 조성 · 협동조합 지역사회 외연 확장을 통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협동조합 설립 지원: 사회적협동조합, 2차 협동조합 설립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과 소경제인의 협동조합 전환 지원 등 · 기존 협동조합의 사업개발 및 운영자금 지원: 협동조합 섹터 내부 거래 시장 촉진, 사업 확장 및 사업 구조 조정, 긴급 운영자금 지원 등 · 연대 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 참여: 협동조합 종사자 연대 복지사업, 지역개발 및 지역복지사업 참여 등

자료: 안진구, 『협동조합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원주협동기금 추진전략』, 『원주에 사는 즐거움 잔치 시즌II 심포지엄 자료집』(2012).

잘 나타난다.¹²⁾ 한편 지역과 밀착해 활동하면서 형성된 신뢰의 기반은 밝음신협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2000년 외환위기 여파로 누적 손실이 23억 원에 달해 밝음신협이 경영위기를 맞았을 때 조합원들의 도움으로 재기해서 2005년 말 흑자로 돌아섰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극복하면서 2011년에 자산 1,000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¹³⁾

현재 원주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에서는 ‘사람’과 ‘돈’, ‘물품’을 매개로 한 상호 부조 기반을 더욱 조밀하게 만들어서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해서 2011년 7월에 네트워크 내의 6개 생협(의료생협, 원주한살림, 원주생협, 문화생협, 노인생협, 상지대생협)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생협에만 가입해도 다른 생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합원 상호 이용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원주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는 회원 단체들이 상호 출자해 연대기금을 만들고, 각 단체의 조합원들이 매달 공제비를 내 상호 부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관련해서 네트워크 내에 ‘협동기금위원회’

12) 현재 밝음신협 건물에는 사회적기업 원주의료생협, 무위당기념관, (사)무위당사람들, 밝음문화교실, 소비자시민의모임, 정토회, 밝음요양보호사 교육원, 사회적기업 햇살나눔, 원주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원주주거복지센터, 원주여성민우회, 강원복지정책연구원 등이 입주해 있다.

13) 시중 금융기관의 부실에 대응하는 일반 고객들과 비교해볼 때 밝음신협 조합원들의 태도는 분명 다르다. 이런 신뢰관계는 밝음신협 관계자의 증언에서도 확인된다. “신협이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와 교육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이를 통해 자립한 조합원들이 신협을 키우는 원동력이 된다.” 『공존 꿈꾸는 따뜻한 대안금융』, 《동아일보》, 2012년 1월 18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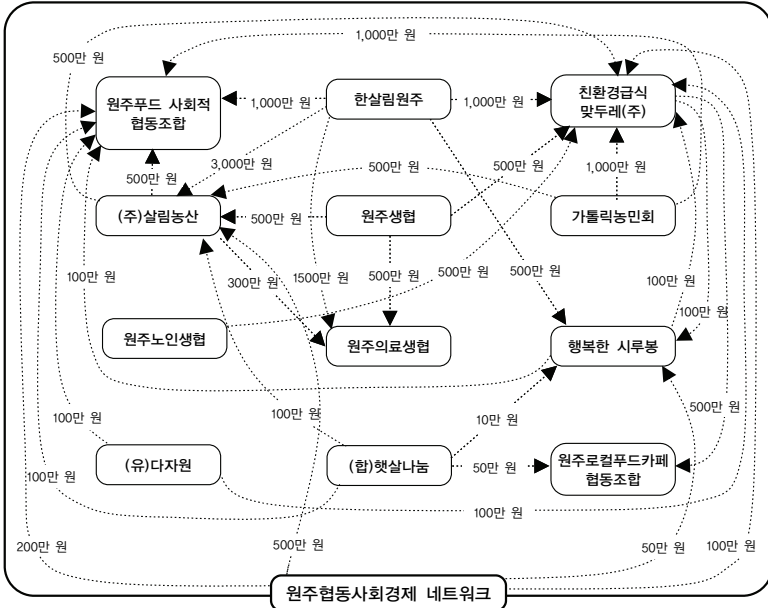


그림3-원주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조직 상호 간 주요 출자 현황

를 설치해서 기금 조성 및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금조성과 관련하여 2009년 한살림원주가 정관 개정을 통해 순이익의 5%를 협동기금으로 적립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다른 단체들도 기금조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주 지역의 상호 부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데 대해 네트워크 참여 단체들이 상호 출자를 통해 협동사회경제 영역의 필요 재원을 마련하고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들도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살림원주'의 경우 원주의료생협(1,500만 원)과 원주푸드 사회적협동조합(1,000만 원), 행복한 시루봉(500만 원), 친환경급식맛두레(주)(1,000만 원), (주)살림농산(3,000만 원) 등 지역 내 여러 협동사업체에게 출자를 하고 있으며, 출자를 받은 '행복한 시루봉'의 경우 한살림원주 외에 (합)햇살나눔(10만 원), 친환경급식맛두레(주)(100만 원), 원주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50만 원) 등으로부터 출자도 받지만 동시에 원주푸드 사회적협동조합(100만 원), 친환경급식맛두레(주)(100만 원) 등에 다시 출자를 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조직들 간에는 사람과 돈 외에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을 연결해 필요한 물자들이 지역 내에 상보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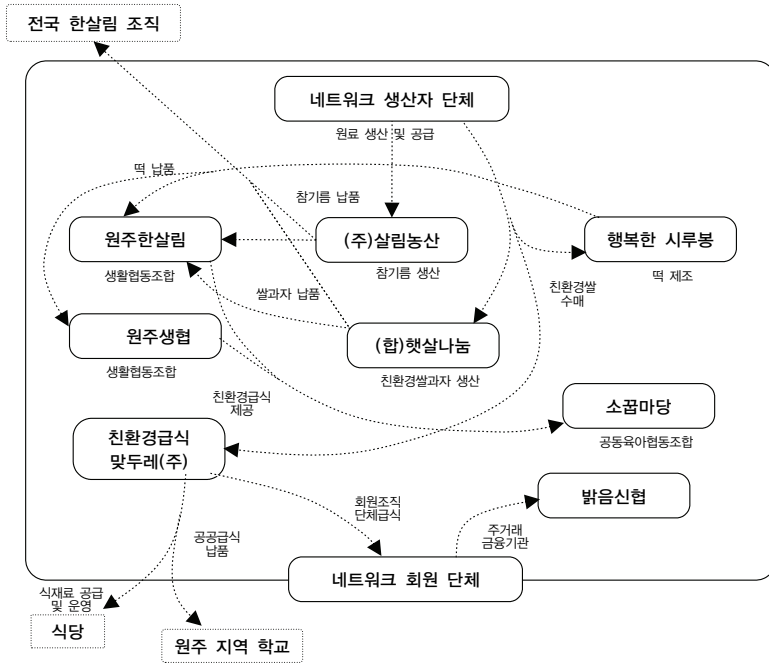


그림4-원주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조직 상호 간 주요 물품 거래 현황

협업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 ‘행복한 시루봉’은 친환경 떡을 만드는 데 필요한 쌀과 잡곡 등을 네트워크의 농민생산자 단체로부터 원재료를 받아 만들고, 상지대 생협, 한살림원주 매장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상호 이익체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친환경급식맞두레(주)’의 경우 친환경급식을 위한 재료를 역시 네트워크의 생산자단체로부터 구입하고 원주지역 학교나 네트워크 회원단체 등에 급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V. 원주 모델이 우리나라 도시공동체운동에 주는 의미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도시들의 대안적 발전방안으로서 ‘공동체’와 ‘협동’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도시들의 발전 경로가 그러하듯이 공동체와 협동의 가치를 도시 속에 실현하기에는 구성원들의 인식과 토대, 경험과 역량 등에서 아직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도시의 경제, 사회, 공간 부문을 아우르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새로운 도시공동

체운동에 대한 요구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이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이론이나 사례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도시공동체운동,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높은 기대에 편승해 제도적 지원에 의존한 조급한 성과주의의 모습마저 나타나고 있다. 자칫 행정이 제시한 목표에 따라 민간의 영역을 동원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공동체’와 관련해 작년 9월에 2017년까지 총 975개의 마을공동체 조성 지원과 3,180명의 활동가를 양성한다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고, ‘협동조합’과 관련해서도 작년 7월 ‘협동조합도시 서울’ 비전을 선포하면서 향후 10년간 서울에 8,000개의 협동조합을 만들어 14조 3,700억 원 규모의 생산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런 흐름은 본래의 목표나 의도와는 별개로 도시공동체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과정’과 ‘사람’을 놓치고 자율과 자립을 해칠 우려가 크다.

이런 점에서 자율과 자립, 자치에 기반해 아래로부터 상호 협력체계를 만들어온 원주 협동조합운동의 경험과 문제의식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주 모델의 특징은 협동조합 개별 조직의 범주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공동체적 전망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나가고 있다는 점에 있다. 즉, 네트워크가 가진 상호 협력의 힘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community based) 협동조합운동’에서 ‘협동조합이 이끌어가는(cooperative driven) 지역공동체 만들기’로 역할의 차원을 변화,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부문과 영역, 주체 등의 ‘경계를 넘어선 협력(cross-sectoral collaboration)’이야말로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성을 높이는 중요한 힘인데, 원주의 모델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원주의 다주체 간 네트워크를 통한 협동조합 모델은 현재 진행형이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실험들을 전개해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한 원주 모델의 특징을 ‘뿌리’, ‘전환’, ‘토대’로 표현해볼 수 있다. 즉, 원주가 지금까지 비교적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바탕에는 40년이 넘는 협동조합운동의 역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협동운동 3세대가 공존하면서 경험의 세대 간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러면서도 다양하고 새로운 도전들 속에서 든든한 사상적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전환에 대한 고민 속에 기존 운동방식들을 성찰하고 지속적으로 진화시켜 온 점, 그리고 사상-사업-활동은 물론 사람-돈-물품을 유기적으로 연결

한 상호 부조 시스템과 인프라 조성을 통해 지역자립 기반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고자 노력한 점 등을 원주 모델의 주요한 힘이자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현재 원주는 생산과 소비의 상호 조직화와 다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협동사회경제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지역공동체성을 실현해가고 있다. 이를 위해 ‘협동사회경제 블록 단단하게 만들기’,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풍부한 조성’, ‘살림의 그물망 촘촘하게 만들기’ 등으로 자신들의 목표와 전망을 다듬어가고 있으며, ‘생산-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물질의 흐름을 협동경제 영역을 상호 연결해서 지역 자원순환 체계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목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통해 협동사회경제의 동종(同種) 영역 간 협동을 넘어 이종(異種) 영역 간 협동체계를 만들어오고 있다.

물론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네트워크의 보다 확장된 역할을 위해 기존의 구심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주체(NGO, NPO단체, 지역풀뿌리단체, 종교단체, 교육단체 등)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나아가 행정(중앙과 지방자치단체)과 의회, 기업 등과도 협동사회경제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원주의 네트워크가 조직 간 협업과 연대의 측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합원이 살고 있는 생활권 단위로 기초 조직들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네트워크의 힘을 더욱 끌어올리는 노력도 중요하다. 이것은 자립에서 자치로의 전환과도 연결되는 과제인데, 현재 원주 지역사회를 둘러싼 각종 개발압력과 이주민 증가로 도시의 정체성이 크게 변화될 여지가 높은 만큼, 민간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를 만들어 온 경험들을 도시민들의 생활자치로 연결시키고, 나아가 협동의 가치로 정치,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서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해나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기봉, 「원주 지역 시민사회운동의 역사와 전망」. 『평론원주』 통권 제1호, 1998, 80-89쪽.
- 김선기, 「대안사회를 위한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민교육』 제5호, 2011, 33-37쪽.
- _____, 「기본법시대, 새로운 협동조합과 지역활성화」. 『지역에서 희망을! 순환과 공생의 지역 만들기』, 제9회 전국지역리더대회 자료집, 2012a.
- _____, 「지역 호혜 시스템 구축과 참여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원주에 사는 즐거움’ 잔치 시즌 II: 협동조합, 원주의 길을 묻다』,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심포지엄 자료집, 2012b.
- 김선기·김달현,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 간 협업(協業) 체계 구축 필요성 및 수요분석에 따른 2차 협동조합 설립 가능성에 관한 연구」. 『2012 지역살림운동을 위한 한살림 연구지원 공모사업 결과자료집』, 2012.
- 김용우, 「생명운동 및 협동조합운동과 원주지역사회」. 『평론원주』 통권 제8호, 2002, 14-36쪽.
- 김형미, 「공동체운동이란 무엇인가: ‘한국생활협동조합운동’을 중심으로」. 『황해문화』 제80호, 2013, 16-39쪽.
- 박준영, 「원주 협동조합운동과 대안의 지역공동체」. 『환경과생명』 통권63호, 2010, 221-232쪽.
- _____, 「원주에 협동공화국을 만들자!」. 『‘원주에 사는 즐거움’ 잔치: 가난하고 무지한 이들이 일구는 착한 경제』,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심포지엄 자료집, 2011.
- 서성진, 「원주지역 생협운동의 프레임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신병식, 「20세기 원주 1000년: 압제에 대한 저항의 도시」. 『평론원주』 통권 제3호, 2000, 15-34쪽.
- 안진구, 「협동조합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원주협동기금 추진전략」. 『‘원주에 사는 즐거움’ 잔치 시즌 II: 협동조합, 원주의 길을 묻다』,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심포지엄 자료집, 2012.
- 양세훈, 「마을공동체 활성화 핵심수단, 사회적 경제 프로그램과의 연계방안」. 서울 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자료, 2013.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원주에 사는 즐거움’ 잔치: 가난하고 무지한 이들이 일구는 착한 경제』.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심포지엄 자료집, 2011.
- 정규호, 「풀뿌리 사회경제 거버넌스의 의미와 역할, 원주 지역 협동조합운동을 사례로」. 『시민사회와 NGO』 제6권 제1호, 2008, 113-148쪽.

- _____,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의 창조적 결합을 위하여」. 『모심과살림』 제0호, 2012a, 63-86쪽.
- _____, 「한국 도시공동체운동의 전개과정과 협력형 모델의 의미」.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신문화연구』 통권 제127호, 2012b, 7-33쪽.
- 조세훈·우영균, 「협동조합 지역사회 만들기: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사례」. 제5회 전국지역리더대회 발표문, 2008.
- 최혁진, 「시장경제를 넘어 지역과 미래를 살린다」. 『환경과 생명』 제50호, 2006.
- _____, 「원주 사회적 경제 운동의 나아갈 방향과 비전에 대하여」. 『‘원주에 사는 즐거움’ 찬치: 가난하고 무지한 이들이 일구는 착한 경제』,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심포지엄 자료집, 2011.

《동아일보》, 「공존 꿈꾸는 따뜻한 대안금융」. 2012년 1월 18일자.

- Cabaj, M., “CED and Social Economy in Canada: A People’ History.” *Making Waves*, Vol. 15, No. 1, 2004, pp. 113-120.
- Majee, W. and Hoyt, A., “Cooperatives and Community Development: A Perspective on the Use of Cooperatives in Development.”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Vol. 19, 2011, pp. 48-61.
- Nadeau, E. and Wilson, C., “New Generation Cooperatives and Cooperative Community Development,” in Nerrett, C. & Walzer, N.(eds.), *A Cooperative Approach to Local Economic Development*, Westport, CT: Quorum Books, 2001.
- Rooij, S. de., “Endogenous Initiatives as Driving Forces of Sustainable Rural Development.” Sabine de Rooij et al,(eds), *Endogenous Development in Europe*, BDU, Barneveld, the Netherlands, 2010.
- Zeuli, K. and Radel, J., “Cooperative as a Community Development Strategy: Linking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Regional Analysis and Policy*, Vol. 35, No. 1, 2005, pp. 43-54.

국 문 요 약

도시적 삶이 주는 소외감과 불안감, 피로감이 커지면서 공동체적 관계의 복원과 확장을 통해 삶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들어 ‘도시와 ‘공동체’의 새로운 만남, 즉 ‘도시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이유도 이 때문이다.

오늘날 도시공동체는 도시민들이 당면한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고, 생활에 필요한 공공재를 공동생산하며, 도시지역 전체를 상호 의존적인 관계망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역할을 새롭게 부여받고 있다. 이 점에서 생활의 구체적인 필요들을 조직해서 협동의 힘으로 자립 기반을 만들어가는 협동조합은 도시공동체운동과 관계가 밀접하다. 따라서 오늘날 협동조합의 모델 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원주 지역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협동조합 지역사회를 향한 원주의 실천 사례들은 외부 지원에 의존하기 보다 민간 영역의 자율적 노력으로 아래로부터 상호 협력 체계를 만들어 온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개별 민간 주체들이 가지는 역량의 한계를 ‘네트워크’를 통해 극복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즉, 원주 지역사회에 축적된 협동의 경험과 역량들을 현재의 활동으로 체계적으로 연결시키는 데 경계를 넘어선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주의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조직들은 ‘사상-사업-활동’은 물론 ‘사람-돈-물품’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왔으며,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를 협동사회경제의 ‘블록’, ‘생태계’, ‘그물망’으로 만들기 위한 전망들을 세워 ‘협동조합이 이끌어가는 지역공동체 만들기’를 단계별로 실천해 오고 있다. 협동조합 지역사회를 향한 원주 모델이 가진 이러한 경험과 특성들은 우리 사회에 자율과 자립, 자치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해주고 있다.

투고일 2013. 10. 11.

심사일 2013. 11. 10.

게재 확정일 2013. 11. 15.

주제어(keyword) 도시공동체운동(urban community movement), 협동조합운동(cooperative movement), 원주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Wonju cooperative social economy network), 경계를 넘어선 협력(cross-sectoral collaboration), 협동조합 지역사회(cooperative community)

